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과 해당국 고려인들의 역할 가능성 제고*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성 동 기 (인하대학교)
(tassdk@hanmail.net)



I. 서론

알렉산더 보론초프(Alexander V. Voron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한국·몽골학부장은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엘친과 푸틴대통령의 집권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

첫째, 엘친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은 친(親)한 편중 정책을 펴 대북관계는 소원하게 됐

다. 이 시기 러시아의 공식적 대북 외교 정책 기조는 “북한과의 사실상 단절”이었기 때문에 대북 관계가 냉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의 대북관계는 진정한 국면을 맞게 된다. 푸틴은 전임 엘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 완전히 대립된 정책을 추구한다. 그는 2000년 7월 선진 서구 국가 원수로써는 처음으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2001년부터 향후 10년간 러시아와 북한은 소위 “우정”을 기반으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에 서명하면서 2차 세계에 걸친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고 현실적인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북 강경 대응이 오늘날 양국간 냉각상태를 초래했다.²⁾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4강의 일원으로 남아있지만,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당국의 남북한에 대한 전략은 일관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1995년 6월 한국을 방문했던 러시아 알렉산더 파노프(Aleksandr N. Panov) 외무차관은 러시아·중국·미국·일본 4국은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이거나, 방관자이거나, 현상 유지론자이거나, 방해자이거나 네 가지 중 하나에 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판단은 한국이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³⁾ 강원식(2001: 324)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적극적으로 정세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보다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며 주변정세의 변화를 주도면밀하게 관측한 후 최적의 대응책을 모색·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성권(2009: 106)은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남북한 양국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 차원에서 러시아는 남북한에 대하여 적국이나 우방을 구분하지 않는 균형적인 관계로 군사적인 제재보다는 안정보장의 상호보장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실용주의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우리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방안을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세부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한 어렵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유용한 협력대상인데 한국은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러시아의 비중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우리가 자칫 러시아를 자극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당국이 방해자로 존재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

2) 현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전임 푸틴 대통령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정제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3)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검색일: 2010. 07. 02)

4) 최근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자체적인 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5)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9/08/01/200908010500001/200908010500001_1.html(검색일: 2010. 07. 02)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0602)

1) 알렉산더 보론초프, 2010, “러시아 - 북한: 과거와 현재,” 『북한해양수산저널』 제2호, pp. 7-8.

고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전략과 전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 그리고 2005년 11월에는 실질적인 동맹관계인 '상호 군사보호 동맹조약' 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남북한과 관련된 양국간의 정보교류 역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대사관이 존재한다.

구소련 연방공화국이었던 15개 국가들 중에서 현재 북한대사관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북한은 1993년 우즈베키스탄에 대사관을 개설 하였으며, 1998년 경제난 악화에 따른 외교망 정비사업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주재 자국의 대사관을 폐쇄한 후 해당국을 독립국가연합(CIS)내의 거점공관으로 운영 중에 있다.⁶⁾

셋째, 북한을 왕래하는 고려인이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일부는 구소련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으로 왕래를 빈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해당국에는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망명하였거나 도주했던 한인들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창구 역할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으며, 북한과 교류를 가장 활발히 하는 자들은 조선족이다. 그러나 중국 이 외에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해당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활용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남북한 관계 분석

구소련 연방공화국들 중에서 러시아와 함께 남북한 대사관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의 남북한 관계가 분석될 것이다.

둘째, 해당국 고려인 사회의 남북한 관련 단체들의 분석

일찍이 구소련부터 교류를 해 왔던 해당국 고려인 사회에 존재하는 친북단체와 독립 이

6) 외교통상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개황. 2005. pp. 69.

후 나타난 친남단체들이 분석될 것이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문제점과 과제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고려인 사회의 해당국내 실태가 분석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인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그들이 준비해야만 하는 과제가 제시될 것이다.

넷째, 한국정부의 지원방안과 전략 제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고려인 사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제시될 것이다.

II. 본론

1. 우즈베키스탄의 남북한 관계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남북관계

먼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외교관계를 분석해 보겠다.⁷⁾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30일 우즈베키스탄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이후 양국은 공로명 주러시아 연방대사와 아크말 사이도프(Akmal Saidov) 모스크바주재 우즈베키스탄 전권 대표가 1992년 1월 29일 모스크바에서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3년 12월 해당국에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1996년 1월에 한국주재 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 설치되었다. 양국은 2006년 3월 29일 우즈베키스탄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선언하였다.⁸⁾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제1의 투자국으로서 독립 초기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2005년 3월까지 약 11억 달러 상당(누계)을 투자한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자본이 참가하여 설립된 350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의 57개 기업은 100% 한국자본으로 이루어져 활동 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자동차 제조, 섬유공업, 전기산업, 건설, 농업, 가공분야, 서비스 산업, 통신, 정보기술 분야 등과 같은 산업부분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두 국가간의 상품 유통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⁹⁾ 이처럼 독립

7) 외교통상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개황. 2005. pp. 45-46.

8) 이후 2009년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과 2010년 2월 10일에서 12일까지 카리모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교류를 전개하였다.

9) 1996년 대우자동차에 의해 설립된 합작기업 '우즈-대우오트' 는 해당국을 세계 29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만들어 주었다.

초기부터 한국기업들의 해당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과 이를 통한 해당국 경제의 성장은 단기간에 양국관계가 발전하는데 바탕이 되었다.¹⁰⁾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분기점으로 해당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독립 이후 진행된 한국 기업들의 활동과 성공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표-1〉 대(對)우즈베키스탄 수출입 동향

(단위 : 100만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합 계
2005	51.5	51.3	564.5
2006	44.8	568.1	612.9
2007	69.8	514.4	583.9
2008	91.5	965.1	1,056.6
2009	102.6	1,125	1,228

※ 출처 : KIEP, 2010, 우즈베키스탄-한국의 경제 투자 협력 관계 발전 현황과 향후 동향

북한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교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¹¹⁾

북한은 1992년 1월 우즈베키스탄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3년 7월에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1998년 카자흐스탄주재 대사관의 폐쇄이후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및 값싼 원자재 수입을 감안하여 우즈베키스탄주재 대사관을 중앙아시아 거점 공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측은 북한주재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중국주재 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국간 체결된 상호 협력협정 실적, 교역·투자 등 실질 협력관계, 정상 등 고위급 교류사례 등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대(對)북한 교역규모는 2004년 기준 약 2,000만 달러였으나, 현재는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¹²⁾

(2) 우즈베키스탄의 친한 정책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 먼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국이 한국을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과 함께 5대 중점 외교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이를 바탕으로 해당국의 친한 성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0) 외교통상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개황, 2005, pp. 51-53.

11) 우즈베키스탄주재 한국대사관, 북한-우즈베키스탄 관계 보고서, 2008.

12) 2005년 7월에 북한이 우즈베키스탄에서 15t 정도의 과일을 수입했다고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가 전했다.

KOTRA는 “우즈베키스탄이 수출입 통계를 비롯한 모든 통계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이를 지도층의 주요 행사 등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k.joins.com/news/view.asp?aid=2608222&cont=>)(검색일: 2010. 07. 06)

13) 우즈베키스탄주재 한국대사관, 한국에 대한 인지도 보고서, 2008.

첫째, 우리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남북 화해·교류 등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등 대북정책에 공조하고 있다.¹⁴⁾ 특히 2000년 12월 KED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북한 경수로 건설에 자국 인력 500명을 투입하는 등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였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중요한 협력 국가이다. 예를 들면, 여수 엑스포 유치 지지 및 참가 조기 결정,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지지,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2007년-2010년) 입후보 지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과 만국우편연합(UPU) 이사국 입후보 지지, 반기문 장관의 UN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최초 공개 지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8) 한국 유치 지지 등이 있다.¹⁵⁾

셋째,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된 한국인 납치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인질사태를 해결하는데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인접국이고 해당국에 우즈베크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과 협상이 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탈레반을 비롯한 이슬람원리주의 단체에 대한 정보를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더욱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우즈베키스탄내 위상은 북한과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국이 절대적인 친한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2. 해당국 고려인 사회의 남북한 관련 단체들의 분석

우즈베키스탄에는 구소련 시기에 북한에서 넘어온 다양한 부류의 한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노영돈(1998: 266)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당시에 구소련에 존재하였던 북한 출신들은 1945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에서 구소련으로 넘어간 자들과 그 자손들이었다. 이들은 구소련의 북한 점령기에 구소련과의 노동계약으로 캅차트카 등지로 건너갔다가 남은 자들, 구소련이 북한정권을 창출을 위하여 소위 ‘간부수출’의 형식으로 북한에 파견하였다가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파 숙청시 다시 소련으로 쫓겨간 자들, 그리고 구소련 점령기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시베리아 등지

14) 2010년 2월 10일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한 다자협상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1/2010021101264.html)(검색일: 2010. 07. 06)

15) <http://news.mofat.go.kr/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2655&ssid=19&mvid=755>(검색일: 2010. 07. 06)

로 유형간자들, 그 외 외교간, 유학생 등이 구소련으로 망명한 자들이 포함된다.”

이들 중에서 당시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으로 넘어온 자들은 김일성의 소련과 숙청과정에서 망명한 자들과 범죄자로 낙인찍혀 도망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현재까지 이 시기에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으로 넘어온 북한 출신의 한인들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출신으로 우즈베크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방대학교 한국어과 학장이었던 김문욱(1999: 164)교수는 당시에 해당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8·15 광복 이후 스탈린에 의하여 북한에 파견되었던 친소파 고려인 “정치위원”들이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다는 것,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한다는 미명으로 구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공 측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 북한의 6·25 남침을 전후하여 구소련에 들어 왔던 북한계 조선인들의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것, KGB의 감시가 항상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출신의 한인들은 고려인 사회에 흡수되어 살았으며,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북한에 친척을 두고 떠났기 때문에 지속적인 서신교환이나 왕래를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북한이 고향인 고려인들이 친척방문을 위해 북한을 오고가는 사례가 있었다.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과 북한의 교류 그리고 북한 출신의 한인들이 우즈베크스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소비에트 정권은 어떤 형태라도 소수민족 단체의 형성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북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89년 9월 20일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 의해 채택된 ‘현시조건에서의 당의 민족정책’에서 고려인을 포함하여 강제이주를 당한 민족들을 나열하고 이러한 강제이주가 소련이 안고 있는 민족문제를 악화시킨 중대한 원인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구소련의 민족정책은 새로운 기초위에서의 민족관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민족정책을 위한 우선적인 방침의 하나로 각종 민족자치제의 권리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을 나열하였다.¹⁶⁾

이러한 변화된 정책으로 인해 창설된 친북단체가 바로 1989년 11월에 설립된 ‘조선통일촉진위원회’인 ‘아소크’(Ассоциация Содействия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йцев (АСОК))였다.¹⁷⁾ 북한은 당시 구소련에 거주하던 고려인을 중심으로 친북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

시에 고려인 엘리트들과 친북 동조자들을 물색하여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초청하여 위의 기구 설립을 지원하였다. 북한은 한글교과서, 김일성 회상기, 북한체제 선전 자료들을 보내기도 하였다.¹⁸⁾ ‘조선통일촉진위원회’는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 지부를 두었으며, 1993년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로 개칭하였다.¹⁹⁾ 이 시기 고려인들의 문화는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과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최승희식 무용이나, 한복·어법·창법 등이 그렇다. 당시에는 한글교육도 북한대사관에서 지원하는 북한 교과서를 사용면서 언어정체성을 지켰다. 즉 우즈베크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생활문화는 오로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들의 유일한 고국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지금도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와 같은 단체들은 북한대사관의 지원을 받으며 우즈베크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과 교류를 하고 있다.²⁰⁾

구소련 당국은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통제하는 친북고려인협회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가급적 이들을 구소련 전체 고려인들을 포괄하는 중앙집권적 형태의 고려인문화협회 창설을 모색하였다.²¹⁾ 1989년 5월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고려인협회’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곧이어 각 공화국 별로 협회 내지 문화센터가 생겨났다. 이들 ‘중립적이고 친남한적인 조직’들은 1990년 5월 전소고려인협회(Всероссийскую Ассоциац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АСК))로 전국화하였다. 그 후 이 조직은 구소련의 붕괴에 따라 1992년 국제고려인협회연맹(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их Ассоциаций (МККА))으로 개편을 하게 될 때까지 한인들의 민족적 자긍심 고취, 유대 강화 그리고 강제이주와 숙청에 따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주요활동 목표로 삼았다. 즉 민족탄압에 대한 유산청산과 한인사회의 자립, 민족어와 민족문화의 재생과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한 것이다.²²⁾ 1991년 1월에 우즈베크스탄 ‘고려인문화협회’(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АКЦЦ))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그 해 9월 1일 우즈베크스탄이 독립하면서 1992년 우즈베크스탄 고려인문화협회가 창설되었다.²³⁾

현재 우즈베크스탄에 존재하는 친북단체로는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와 1992년 창설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있으며, 친남단체로는 고려인문화협회를 비롯해 고려인사

18) 우즈베크스탄에서는 ‘조선통일촉진위원회’의 지원으로 일간신문 ‘통일’(Тхониль)이 창간되었다. 처음에 ‘통일’은 당시 니자미 사법대에서 조선말을 가르치던 북한 출신 교수들에 의하여 조선말로만 간행되었다. 그러나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일’은 주간신문으로 바뀌었고, 일부 내용이 러시아어로 바뀌게 되었다. (한 발레리, 최소영, 2004, “우즈베크스탄 지역내용어국학 자료 현황: 문헌 자료 및 영상 자료,” 『역사문화연구』 제20집, pp. 6.)

19)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79.

20) www.jcnd.com/print.php3?no=82661(검색일: 2010. 07. 10). 2009년 4월 11일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된 제26차 4월 봄 친선예술축전에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소속의 예술단이 참가하여 공연하였다고 북한언론이 보도하였다. (http://kr.news.yahoo.com/sports/npb/view?aid=2009041211193526380)(검색일: 2010. 07. 07)

21) 김문욱, 1999, “우즈베크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pp. 172.

22) 심현용, 2000, “뿌진 시대의 러시아 민족정책과 한인사회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제1호, pp. 145.

23) http://www.library.cjes.ru/online/?a=con&b_id=416&c_id=4487(검색일: 2010. 07. 10)

회연합회, 고려신문, 고려 가무단, 과학자 협회 등이 있다. 그러나 친북단체들은 북한체제를 해당국 고려인들에게 선전하는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²⁴⁾ 게다가 북한의 경제적 몰락과 북핵문제 등의 사건이 발생한 후로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²⁵⁾ 반면에 고려인문화협회는 한국정부, 한국기업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²⁶⁾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문제점과 과제

(1) 고려인의 실태

독립 후 우즈베크인은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80%를 넘어 인구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국에는 120여 민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즈베크인이 비록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민족정책이 국가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초기부터 이러한 인구분포를 바탕으로 강력한 ‘우즈베크 민족주의’를 추진하였다. 소비에트체제 하에서 우즈베크인 역시 소수민족으로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다른 소수민족들이 가지는 박탈감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우즈베크인들 보다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제약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립이 되고 나서 우즈베크인이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즈베크 정부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정책은 첫째, 우즈베크어의 공식어 공포²⁷⁾, 둘째, 우즈베크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역사교과서’와 ‘새역사책 1, 2, 3’의 발간²⁸⁾ 등이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주의 정책은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달리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인 존재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와 이들을 통제하려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민족 포용책을 범제화시켰다. 첫째, 민족기구의 설립 허용. 각각의 소수민족은 민족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다.²⁹⁾ 둘째, 민족간 차별 금지.

24) 고려인문화협회는 우즈베크 총리실 산하 소수민족 문화부흥 지원센터에 고려인 대표단체로 공식 등록

25) 김문옥, 199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pp. 174.

26) 한국정부의 해당국 거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취업제.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취업제는 2008년부터는 무시험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2,711명의 쿼터 중 2,165명이 신청하여 모두 합격 처리되었으며, 동 쿼터에 대해 2008년 11월 11일부터 방문취업사증(H-2) 신청을 받고 있다. 둘째, 고려인 복지사업. 2010년 3월 26일 고려인 1세대 독거노인을 위한 양로원이 설립되었다. 셋째, 민족교육사업. 한국교육원의 고려인 대상 한국어 교육 활성화, 2005년 10월 개설된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부설 ‘한국문화센터’ 개설, 넷째, 재외동포재단 지원사업. 매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① 고려인동포 방한초청사업 ② 장학생 초청사업 ③ 고려인 단체 활동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우즈베키스탄주재 한국대사관, 고려인 현황 보고서, 2008.)

27) 1989. 10. 21. 우즈베크어를 국어로 하는 법령 공포. 이 후 1993. 9. 2. 우즈베크어를 라틴문자로 전환하는 법령 공포. 1995. 5. 6. 세부규칙 공포. 1996. 8. 31부터 부분적 시행하여 2005. 9. 1부터 시행.

28) 1997년 정부주도로 시작하여 2000년에 발간된 우즈베키스탄 새 역사책.

29) 1996. 11. 13. 399호 우즈베크정부령(요약).

우즈베키스탄 내 소수민족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법규에 명문화 되었다.³⁰⁾

위의 경우처럼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정책은 우즈베크인과 우즈베크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장치를 동시에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내즈베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량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인근 CIS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민족기구나 협회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우즈베크인

을 제외한 소수민족들이 민족적 성격을 가지는 정당을 창단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치활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더불어 해당국의 경제상황은 고려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다. 독립 초기부터 우즈베키스탄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당국은 구소련 연방공화국들 중 러시아(1,680조 m³), 투르크메니스탄(71조 m³)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매장량(세계가스매장량의 2%)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내즈베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량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인근 CIS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추정매장량은 5조 5,000억 m³로 세계 10위의 생산국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이어 구소련 국가 가운데 4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에 달한다. (이재영 · 윤성학 2006: 97)

〈표-2〉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 현황

광종	단위	우즈베키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 톤	4,000	984,211	0.4	19
금	톤	5,300	49,800	10.6	5
몰리브덴	천 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 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 톤	65.62	2,619.31	2.5	10

* 추정치

※ 출처 : 이재영 · 윤성학(2006: 99)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 그 발전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실제로 독립 초기 우즈베키스탄이 구축한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이슬람 카리

30) 우즈베키스탄 헌법 5조 18항.

모프 대통령의 저서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과 “우즈베키스탄 21세기 문턱: 안전의 위협, 안정의 조건 그리고 발전의 보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해당국이 지향하는 경제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였다. 이 원칙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새로운 시장경제를 신중하게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것이었다.³¹⁾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개방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구조로 변화되어 가는데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해당국에 고질적인 문제인 불태환과 이중환율은 위의 정책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이 문제들은 외국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당국 국민들에게도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³²⁾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해당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고려인 사회도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독립 초기에 고려인 사회는 해당국의 ‘우즈베크 민족주의’ 정책과 경제낙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해주로의 재이주, 사업의 실패로 인한 가족의 해체, 직업 선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저하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변화를 제공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및 외국기업의 진출. 독립 직후부터 삼성, 대우 등의 본격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고려인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였다. 한국어의 필요성 증대, 자본주의 경제·경영 학습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기업 및 정부의 지원확대 등으로 인해 고려인 사회는 다른 소수민족들보다 체제전환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비록 고려인 사회에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한 자들은 일부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자본주의에 대한 적용. 독립 초기에 이직을 통해 장사나 사업을 하였던 자들이 실패도 하였지만 성공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즈베크인이 주도하는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은 힘들지만 무역이나 3차 서비스 산업에서 성공한 고려인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고려인 사회에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³³⁾ 결과적으로 고려인 사업가의 등장과 성장은 고려인 사회가 시행착오를 지나 자본주의에 적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1)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1996) pp. 9.

32) 1996년 목화의 국제가격 시세가 내려가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른 외채의 비율이 높아지자 우즈베크 정부는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실시하여야 했으며, 특히 외국기업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부족으로 불태환정책을 고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이중환율을 정부차원에서 조장하였는데, 시장 환율과 공식환율에 차등을 두어 혼란을 초래하였다. 특히 이중환율 구조는 정부 고위층의 불법적인 재산증식 도구로 전락하였다.

33) 예를 들면, 타슈켄트 최대의 레스토랑이자 명소인 ‘청송’은 고려인 박 베라가 주인으로 있으며 건물이 3동에 전체 좌석만 1,000석이 된다. 여기에 고용된 직원은 대부분 고려인이며, 식당과 관련된 연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 주요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

과거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고려인의 정계진출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았다. 당시에 도 비록 러시아인이 주류민족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소수민족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고려인들은 집단농장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공산당간부로 승진하거나 지역 공산당 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대부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중앙정부로 진출하는 경우는 없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하면서 고려인 사회는 소비에트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민족적 차별을 받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체제전환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같이 해당국의 유연한 민족정책과 경제발전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에 이름을 알리는 고려인이 소수 출현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민족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착민족인 우즈베크인이 절대 다수인 양국의 정치권력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재미동포 사회처럼 해당국의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양국이 가지는 독특한 정치권력구조를 이해해야만 고려인의 정치권 진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지는 독특한 정치권력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파벌 중심의 권력 구조

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과정에서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고이나 다름없는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소비에트체제의 혜택을 받아 자신을 능력을 키워 경제 관료가 되었다. 그러나 무명에 가까웠던 그는 사마르칸트 씨족들이 고르바초프에 추천하여 최고 권력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국의 초대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사마르칸트 씨족들이 자신에게 도전하자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는 1998년 자신의 후원자이자 사마르칸트 씨족들의 수장인 이스마일 주라베코프(Ismail Jurabekov)를 권력층에서 몰아냈으며 이후 사마르칸트 씨족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³⁴⁾ 그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슈켄트 파벌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자신의 지역파벌을 지금까지 통제하고 있다.³⁵⁾ 카리모프 대통령 역시 2007년 12월 23일 대선에 출마하여 실질적인

34) 1999년 2월 타슈켄트에 발생한 폭탄테러는 이슬람원리주의 테러단체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의 소행으로 발표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카리모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사마르칸트 씨족의 암살 음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5)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 사태는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사마르칸트 지역파벌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르의 내무부 장관이자 사마르칸트 파벌의 실세인 조키르 알마토프(Zokir Almatov)를 폭력진압을 구실로 사임시키고, 그는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여 독일로 피신하였다.

3선 연임을 달성하고 종신체제를 구축하였다.

둘째, 우즈베크 민족 중심의 정치구조

독립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권과 주요 관료집단에서 소수민족 출신을 찾는 것은 어렵다. 철저한 집권지역과별 중심의 권력 분배(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와 더불어 우즈베크인이 등용되었다. 사실상 소수민족이 정치권이나 관료집단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은 역시 우즈베크인이 전체인구에 80%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정치구조는 소수민족들이 정치권과 관료집단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은 의미 없는 민족할당제에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은 고려인 개인의 능력이 우선이지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역시 고려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정치인은 단 한 명뿐이다.

〈표-3〉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정치인 ³⁶⁾

성명/출생년도	나이/세대	직위/당/당선년도	전직 또는 겸직
박 보리소바 베라/1938	71세/2세대	상원의원/국민민주당/2005	(전)교사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원 개발보다는 2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3차 산업에 종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규제의 다양성과 국제사회에 적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소규모 장사나 무역 이 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제약이 많다. 따라서 고려인은 주로 3차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한국 기업체들과의 연관성.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사업대출의 실질적 불가능, 불태환, 과실송금 규제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체들과 연관된 사업을 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에 대우, 갑을 등과 같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였지만 이들 역시 위와 같은 규제들 때문에 고전하였으며, 고려인 경제인이 주도하는 기업체들과 제휴하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구체적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경제인은 다음과 같다.

〈표-4〉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경제인

국가	성명	나이/세대	회사명	업종
우즈베키스탄	정 겐나지	48세/3세	테겐	소시지 가공
	김 게오르기	45세/3세	프로체스(PA)	가구공장
	유가이 베라	47/3세	청송	요식업

36)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고려인 관료에는 1994-2000년 동안 부총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 빅토르 아나톨리에비치(64세), 1999년부터 현재까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에 재직하고 있는 편 비탈리 등이 있다. 그리고 올해 2009년도 12월 27일 개최예정인 우즈베키스탄 총선에서 안 드리트리예브나, 김 로만 트로피모비치 2인이 11월 23일 후보자로 등록하였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경제인이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475세대 경제인

해당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의 고려인 경제인들은 대부분 40-50대 연령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이주 3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이른바 고려인 사회에서 체제전환기에 가장 적응을 못하는 세대로 불리는 475세대들이다.³⁷⁾ 다른 세대들과 달리 이들은 소비에트체제하에서 교육, 직업, 복지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 국가의 지원이 사라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세대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제전환기에 신속한 적응을 통해 성공을 거둔 475세대에 해당된다. 역으로 말하면 이들의 성공은 다른 세대가 성공한 것보다 몇 배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제전환기에 필요한 업종의 선택과 지속성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폐쇄형 경제시스템과 우즈베크 민족주의로 인해 고려인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권이 상당한 건설부문, 지하자원 개발 등은 우즈베크인 권력층에서 장악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인 고려인이 도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러한 업종에서 고려인이 성공하였다면, 정치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권을 우즈베크인 권력층에 넘겨야 했을 것이다.³⁸⁾ 따라서 이권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사업 정도를 고려인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경제인은 시대에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공하였다.

(3) 고려인 사회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사회는 해당국의 민족주의 정책과 왜곡된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체제전환기에 재도약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고려인 사회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자신들의 사회내부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들의 분열과 부재

37)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되는 '고려신문'의 편집장인 김 부르트는 해당국의 독립 당시에 한국의 386처럼 고려인 사회에도 1950년대에 출생하여 1970년대에 대학교를 수학한 40대 이상을 의미하는 475세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체제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해 고려인 사회가 흔들린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40대 이상의 가장은 소위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이다. 그러나 고려인 475세대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없이 장사나 사업을 시도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등 체제전환기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하였다. 따라서 김 부르트는 475세대가 흔들리면 그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나아가서 고려인 사회가 흔들린다고 주장하였다.

38) 현재 우즈베키스탄 건설부문과 지하자원 개발은 대통령의 직계가족과 친인척들이 장악하고 있다.

고려인의 구심점 기능으로 창설되었던 고려인문화협회는 실제로 고려인 사회 지도자들의 분열을 야기하였다. 이 기구의 창설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시인이었던 박보리스와 철학박사인 한세르게이가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상황이 후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전자가 소련공산당과 정부에 투서와 공개편지를 발송하여 분열을 확대시켰다. 결국 당국은 두 사람을 배제하고 정치학박사였던 한세르게이를 추대하였다. 그러나 부회장이었던 역사학박사이자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과장이었던 김표트르가 실질적으로 협회에 실력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재미교포들이 제삼람을현찰과 선물 등이 횡령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려인문화협회는 고려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려인 사회를 분열시켰다.³⁹⁾ 특히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려인 사회 전체가 남북한처럼 분단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한을 지지하는 세력,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 양국을 모두 지지하는 세력이 공존하면서 고려인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깊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고려인과 지도자들이 남한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열은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도 고려인 사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비록 박베라와 같은 국회의원이 있지만 아직은 고려인 사회를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문직 종사자의 감소

소비에트체제하에서 고려인 사회의 성장은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과 유사한 단계를 거쳤다. 이주 1세대들은 1차 산업 등 블루칼라 직업에 종사하면서 차세대들을 교육시켰다. 특히 소비에트체제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은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들보다 고려인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차세대들은 고려인 가정의 지원과 소비에트정부의 시스템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 없이 능력만 있으면 전문직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 세대가 넘어가면서 고려인 사회는 소비에트체제에 존재하는 소수민족들 가운데서 전문직 진출이 활발한 민족으로 인정받았다. 고려인이 활동한 주요 전문직은 교육직, 연구직, 기술직 등이었다.⁴⁰⁾ 우즈베키스탄에는 120여 민족이 공존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 이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그리고 우즈베크 정부는 소수민족 배려 차원에서 정치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는 소수민족들에게 가능하면 자리를 할당하려고 한다.

39) 김문욱, 199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pp. 172-173. <http://ru.koresaram.doira.uz/Articles/ArticleInfo.aspx?id=99c0cacf-edb7-4fee-bd11-d35933f49ea9>(검색일: 2010. 07. 10)

40) 카자흐스탄 고려인 과학-기술협회인 'КАХАК'이 2002년에 발간한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온다. "고등교육을 받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수는 공화국 평균 수준의 두 배를 능가한다. 만일 15세 이상 된 카자흐스탄 주민들의 1000명당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26명이라면 고려인들의 이 지표는 262명이다. 박사 및 학사 학위를 소유한 고려인들의 수는 500명 이상이다. 또는 공화국 고려인 주민 천 명당 5명이 박사 및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바 이런 지표는 심지어 세계적 수준에서도 좋은 지표에 속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주류민족들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 몇 개의 자리는 소수민족에게 배분하려는 경향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소수민족들을 발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직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법, 경제, 경영 등의 분과학문에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은 비례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모국과 해당국이 원활한 교류를 하기 위해 해당 소수민족을 행정부나 국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기도 한다.⁴¹⁾ 그러나 최근에 고려인의 전문직 진출은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향후 고려인 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4) 고려인 사회의 과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는 현재 한국과 해당국의 안정적인 교류를 통해 분열양상은 정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도자의 부재와 해당국 주류사회로의 입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사회는 비록 지극히 소수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을 배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해당국 고려인 사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제시되고 수행되어야만 한다. 고려인 사회가 직면한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사회의 통합

비록 남한성향으로 고려인 단체들이 대부분 돌아섰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의 통합이 아닌 본질적인 민족통합으로 고려인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의 분열을 상징하는 다음과 같이 말이 있다. "한 직장에 고려인이 둘이면 너무나 다정한 친구, 세 명이면 벌써 고려인 공화국, 네 명이상이 모이면 모함을 받기 전에 직장을 옮겨라"⁴²⁾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소수민족들도 비록 고려인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면도 있지만, 위와 같은 고려인의 부정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을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고려신문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 고려신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발간이 힘들어져도 이를 고려인 사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고려인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인 모금운동과 개인의 기부금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한국정부나 한국 기업체들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이것은 결국 고려인 사회의 지도자 부재와 맥락을 같이



41)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인 한국에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로 고려인 편 비탈리를 장기간 활용하고 있다.

42) 김문욱, 199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pp. 175.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⁴³⁾

둘째, 동북아지역 전문가 및 관료의 배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는 독립 이후 한국기업들의 진출과 더불어 한국어 열풍이 나타났으며,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고려인 차세대들 중에서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어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있다. 한국어 습득을 통해 해당국의 외무부에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주재 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 대사인 편 비탈리를 제외하고 고려인이 근무한 적이 없다. 해당국의 외무부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담당 부서에 고려인은 없다. 따라서 한국어 습득을 통한 외무부 진출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차세대 지도자 양성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는 여전히 해당국의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민족주의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상황은 미국과 다를 바가 없다. 재미동포사회 역시 인종차별과 영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고려인 사회 역시 이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은 고려인 차세대 정치인·경제인 양성에 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에 영향력 있는 고려인 정치가가 없다면 양국간에 원활한 교류를 지속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국간에 민감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 고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고려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4. 한국정부의 지원방안과 전략 제시

(1) 한국정부의 지원방안

한반도 통일 위해 우리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전략과 전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해당국은 이미 우호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해당국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려인 사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지원

43) 실제로 고려인 사회는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고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는 해당국내의 다른 소수민족들은 생각하기도 힘든 것이다. 결국 고려인 사회를 통합시키는 다양한 기회는 준비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

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지원

우즈베크인 소비에트체제하에서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비율이 낮았다. 게다가 러시아인, 유태인, 고려인과 같은 민족처럼 교육열이 높지를 않았다. 따라서 해당국의 전문가들은 소수민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에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독립 이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의 이권이 이들이 차지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우즈베크인 중심으로 제공되는 장학생 선발제도는 해당국의 엘리트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소수민족들은 체제전환기에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학업보다는 경제활동에 집중하였다. 우즈베크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았지만 소수민족들은 사실상 교육만 받기에는 민족적 위상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체제전환기 20년 동안 고려인 사회는 전문가를 과거만큼 활동시킬 수 없었다. 이 부분할 수한 한국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한국정부가 고려인 특별장학금을 우즈베크 정부할 제공하고 이를 해당국 정부가 받아서 고려인 우수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 엘리트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차세대기에게가운데 실력을 인정받는 자들은 정책에서 유학을 할 수 있다.⁴⁴⁾ 그러나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한다면 고려인 차세대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10년 내에 해당국이 여타 국가들처럼 전문직에 대한 대우를 복귀시킨다면 이들은 해당국의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려인 사회 통합 지원

고려인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야 한다. 고려인 이주사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려인 사회 내부의 친북과 친남세력 그리고 구세대와 신세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 고려인은 물론 우즈베크인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려인 사회의 민족·국가정체성 문제는 무엇보다 취약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⁴⁵⁾ 특히 고려인 차세대들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

44)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려인 특별전형' 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45) 입채완(2002: 180, 18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중에서 북한과 남북한 모두를 갔다 왔다고 응답한 자는 모두 4.3%, 남한만 갔다 왔다고 응답한 자는 17.9%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국 고려인 70% 정도는 남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조국이 어디냐는 질문에 러시아 53.3%, 중앙아시아 33.7%, 남한 6.3%, 북한 3.2%, 기타 2.8%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고려인 사회의 분열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시키는 매개가 필요한 것이다.

왔는지 그리고 해당국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사회이중노동영용이었던 김병화의 개인사 박물관은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경제학습의 지원

고려인 사회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보다 육성시키려면 카자흐스탄처럼 고려인 재벌이 배출되어야 한다. 비록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경제시스템과 권력구조로 볼 때, 고려인 재벌은 배출되기 힘들겠지만, 해당국이 국제사회에 맞는 정치·경제시스템을 갖추게 될 때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제학습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창업 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해당국은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을 한다면 해당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려인이 운영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 한국교육원에 창업과정을 개설하여 소자본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전수한다. 그리고 특별과정에는 경영대학원과 같은 단기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해당국의 경제에 맞는 사업개발에 집중하도록 교육시킨다. 물론 한국에서 과가를 초빙하여 노하우를 가르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지원 강화이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고려인 사업가들에게 자본을 제공한다.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후관리 역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고려인 과학자들은 상품화 시키지 못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2)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과 고려인의 활용 전략

첫째, 한국-우즈베키스탄 외교포럼 창설

외교통상부 주최로 3차례 개최된 한국-중앙아시아 외교포럼을 한국-우즈베키스탄 외교포럼으로 특화시키고 정례화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즈베키스탄을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과 차별화해야 한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실효가 없다.⁴⁶⁾

46)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2007년 제1차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서 제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열렸다. 그러나 이 포럼에서 주된 참가자와 인사들은 재미동포사회의 정치인들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록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고려인은 단지 객석을 채워주는 정도로 대접을 받았다. 이처럼 재미동포사회 정치인들에게 집중하는 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이러한 경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인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해당국의 정치인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치인 포럼을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

둘째,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인포럼 창설

위의 외교포럼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상호간 모임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부적으로 유사 업종별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있다. 고려인 경제인을 포함하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인은 건설, 자원, 제조업, 등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맞춤형 모임을 정례화하면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포럼 조직 기관의 단일화

최근에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행사나 포럼을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로 조직하여 개최하기 때문에 질적인 발전이 없다. 따라서 외교포럼은 외교통상부가 경제인 포럼은 전경련이 각각 담당하여 조직하는 기관을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고려인 정치인을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제외시키고 외교포럼으로 차별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재미동포 정치인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치인과의 별도 포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넷째, 한국정부의 고려인 정치인·경제인에 대한 해당국 정부에 관심 제시

우즈베키스탄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정치인·경제인에 대해 언급을 자주하고 관심을 보여주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한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해당국에서 향후 고려인 정치인·경제인이 보다 많이 배출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한국 기업체들의 신뢰성 향상

한국 기업체들이 해당국에 진출하여 신뢰성 있게 사업을 한다면 그곳의 고려인 정치인·경제인 역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해당국 정부에서 고려인 정치인·경제인의 가치마저도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려인 정치인·경제인의 위상 변화는 스스로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이 해당국에서 가지는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섯째,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 추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정부와 기업체들은 과거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려인 정치인·경제인을 동등한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 그들도 한국정부나 기업체가 재미, 재일동포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인식하고 포럼을 조직해야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III. 결론

우리에게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비하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독립 이후 체제전환기에 직면한 우즈베키스탄으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해당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이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한국이 가지는 이미지는 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보다도 긍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는 1993년에 개설된 북한대사관이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국과 북한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큰 진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에 북한대사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북한문제에 관여하는 상위그룹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외에도 남북한과 동시에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하위그룹의 국가로 친한(親韓) 성향이 강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질서 및 지역정치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내 거주하는 고려인은 해당국으로 한국이 진출하기 이전까지 북한으로 왕래를 빈번하게 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사정에 밝았으며, 비록 지금은 활발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북한을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사정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이며, 러시아와 공유하는 정보를 우리와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가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식, 2001, “러시아 푸틴 정권의 국제정세관과 한반도 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5집, 제2호.
- 김문옥, 199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 노영돈, 1998, “구소련의 고려인 정책과 현CIS내 한인의 실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9집.
- 심현용, 2000, “뿌전 시대의 러시아 민족정책과 한인사회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제1호.
- 알렉산더 보론초프, 2010, “러시아 - 북한: 과거와 현재,” 『북한해양수산저널』 제2호.
- 윤인진, 2005,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비교,” 『한국사회』 제6집.
-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1996)
- 이재영 · 윤성학,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가이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서울: 한국무역협회, 2006)
- 임채완, 2002,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통일문제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38호).
-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서울: 통일연구원, 2007).
- 한 발레리 · 최소영, 2004,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한국학 자료 현황: 문헌 자료 및 영상 자료,” 『역사문화연구』 제20집.
- 우즈베키스탄주재 한국대사관, 고려인 현황 보고서. 2008.
- 우즈베키스탄주재 한국대사관, 북한-우즈베키스탄 관계 보고서. 2008.
- 우즈베키스탄주재 한국대사관, 한국에 대한 인지도 보고서. 2008.
- 외교통상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개황. 2005.
- 우즈베키스탄 정부법령
- 우즈베키스탄 헌법
- КАХАК,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Алма ты, 2002)
- <http://nk.joins.com/news/view.asp?aid=2608222&cont=>(검색일: 2010. 07. 06)
- <http://kr.news.yahoo.com/sports/npb/view?aid=2009041211193526380>(검색일: 2010. 07. 07)

- <http://news.mofat.go.kr/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2655&ssid=19&mvid=755>(검색일: 2010. 07. 06)
- <http://ru.koresaram.doira.uz/Articles/ArticleInfo.aspx?Id=99c0cacf-edb7-4fee-bd11-d35933f49ea9>(검색일: 2010. 07. 10)
-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1/2010021101264.html(검색일: 2010. 07. 06)
- http://www.library.cjes.ru/online/?a=con&b_id=416&c_id=4487(검색일: 2010. 07. 10)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검색일: 2010. 07. 02)
- www.jndn.com/print.php3?no=82661(검색일: 2010. 07. 10)

